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10월 2차 (2019.10.16~ 10.31)



주요 현안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월 18일(금)부터 시행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1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587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발간

-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의 건강에 관한 한글 번역도서인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편람)」을 발간함.

-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42개국 장애인 여성들의 성장, 임신, 출산, 양육, 노화, 정신건강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여성이 '건강한 삶'을 가꾸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2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1341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적극 고용개선조치 대상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
-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0.3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34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 강화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률 개정은 앞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608

9월 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지정

☑ 여성가족부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 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 된 여권통문이 선언된 날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6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610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19-10-29	현행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2019-10-30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9-10-31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9-10-31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안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4인)	2019-10-31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문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2019-10-31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2019-10-25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연구 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9-10-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신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
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9-10-30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9-10-30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삭제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2인)	2019-10- 23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4인)	2019-10- 3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2019-10- 30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23인)	2019-10- 30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이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2019-10- 30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사·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9-10- 25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성희롱 행위요건의 차이로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2019-10- 28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9-10- 28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2019-10- 28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9-10- 31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취업 제한의 법적 미비를 정비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3인)	2019-10-31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 등과 합성함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과 그 합성물 등을 유포한 사람 등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여,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의 확산 방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9-10-31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미투 운동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	10.16	세계일보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강간미수' 무죄... "남녀 간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6513865?OutUrl=naver
	10.21	여성신문	[히포시 토크] "남성으로서 자기가 누린 이득에 대한 성찰 필요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47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0.25	아시아경제	"82년생 김지영, 女 피해망상" 한국남성, 왜 '김지영' 공감 못하나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315584527405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10.27	한국경제	'82년생 김지영' 두고 왜 또 갈라졌나...한국 사회 뒤틀린 젠더 갈등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0251705H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0.17	서울신문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7010005&wlog_tag3=naver
10.17	조선에듀	"청소년 성 평등 인식 격차 심화... 토론 활용한 성 인지 교육해야"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1429.html
10.18	여성신문	여성화장실 없는 조직 55.1% "여성 대표성 여전히 약하다"	구미영 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35
10.22	연합뉴스	선진국보다 심한 여성 경력 단절...육아기 고용 부진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22001800038?did=1825m
10.22	뉴시스	직업 좋다는 여교사도 출산·육아에 유리천장 견고... "제도·문화 바꿔야"	최윤정 부연구위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2_0000806071&clD=10201&plD=10200
10.25	여성신문	[여성논단] '성희롱'은 단지 '성희롱'이 아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990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가구 대상 주요 소득지원제도인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연령에 따른 제도의 개별 효과성과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포괄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아동가구 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19.10.21]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72&ano=1